

“성과 중심 임금·고과제도 자체가 폐해”

삼성전자 성과급 현황 연구 결과 발표... 친분·학연·지연 영향에 노력 반영도 안 돼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삼성의 성과 중심 고과·임금제도가 불합리하고 업무 비효율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삼성 성과급 임금제도 현황과 폐해 연구 발표·토론회’를 열었다.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로서 공정한 분배와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회사를 구성하는 노동자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삼성전자, 삼성SDI가 일류기업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한 기업의 인사 고과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세계 일류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내부



조직문화를 조사해보니 매우 후진 기업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과급 임금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가 보여주듯 성과급제도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삼성 문제뿐 아니라 윤석열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의 문제를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 고과 제도 현황과 폐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345명, 삼성SDI 91명 등 노동자 44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 7명, 삼성SDI 15명 등 22명은 면접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담은 ‘삼성 고과제도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금속

노조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67.9%는 사측·관리자가 고과평가를 객관 기준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과 평가가

개인의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냐는 질문에 76%의 응답자가, 고과평가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고과평가 시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응답도 68%에 달했다.

최근 6개월이 기준인 고과평가에서 6개월 이전의 실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49%, 고과가 관리자와의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55%였다. 관리자가 고과평가 시 친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6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노동자들은 고과평가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삼성의 고과평가 제도는 ▲개인의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계속 반영하는 등 선입견을

